

한미FTA, 궁금하십니까? -주요 Q&A를 중심으로-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한미 FTA 주요 Q&A 목차

I. 절차적 비판

1. FTA 왜 하는가?	1
2. 왜 하필 미국인가?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3
3. 왜 졸속으로 추진하나? 꼭 내년초까지 타결되어야 하나?	5
4.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은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	7
5. 미국은 정보 공개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나?	9
<참고> 외국의 협정문안 공개사례	10
<참고> 통상절차법 논의동향 및 문제점	11

II. 분야별 효과에 대한 비판

1. 농업은 피해될 것이다?	12
<참고> 한-칠레 FTA의 농업에 대한 영향	16
2. 제조업의 혜택도 크지 않을 것이다?	18
3. 국내 제약산업이 몰락할 것이다?	21
4. 서비스산업도 종속될 것이다?	22
5. 스크린쿼터 축소로 우리문화가 죽는다?	23
6. 방송개방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25
7. 교육개방은 공교육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26
8.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28
9.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29

III. 기타 쟁점

1. 쌀 제외가 가능한가?	31
2.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왜 허용 하려 하는가?	32
3. NAFTA로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34
<참고> NAFTA의 대 캐나다·멕시코 효과	36
<참고> NAFTA의 대 멕시코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의 평가	37

IV. 과거 개방 사례

1. 비판론자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개방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 져왔나?	38
2. 개별 사례	39
가. UR 농산물 협상	39
나. 한-칠레 FTA	41
다. 영화직배 허용	43
라. 일본영화 상영허용	44
마. 유통시장 개방	45
바.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48
사. 물질특허제도 도입	51
아. 바나나시장 개방	54
자. 과자시장 개방	55
차.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56

I. 절차적 비판

1 FTA 왜 하는가?

①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기회

- 치열한 경쟁없이 선진국은 불가능
- 우리 국력(세계12위)상 외부압력으로 개방하던 시대는 지났음
→ 개방을 능동적·도전적으로 추진

② 개방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 개방 없이 오늘날 세계 12위 경제가 가능했겠는가?
개방 없이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악화
 - * 잠재성장률 전망(%): ('10년대) 4.3→('20년대) 2.9→('30년대) 1.8→('40년대) 1.4
 - BRICs의 맹추격,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부담
 - * “20년 후엔 중국이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대체할 것이다.”
('06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
- 무역의존도가 70%인데 개방 안하고 살 수 있는가?
 - * 무역의존도('04년, %): (한국) 70.3, (미국) 20.0, (일본) 21.8, (영국) 37.2, (중국) 59.8
- FTA 외면시 국제사회에서 ‘왕따’
 - FTA는 체결국간 무역이 증대하기 때문에 비체결국(역외국)의 수출여건은 갈수록 악화
 - 세계무역의 50% 가까이 FTA 등 지역협정체결국간 수행

③ 기왕 개방할 바에야 양자간 협상(FTA)이 다자간 협상보다 유리

- DDA 협상 중단 등 WTO 체제는 정체
 - 다자간 협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의가 쉽지 않고,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는 데에도 한계

- 양자간 협상(FTA)은 1:1로 주고 받는 협상
 - 양국 산업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 제3자를 배제하고 당사자끼리만 이익 추구를 할 수 있어, 상호 win-win이 가능

※ 세계는 FTA 체결 경쟁중

- '06.7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7건의 지역협정 중 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37건이며, 세계 무역의 50% 가까이 차지

< 주요국별 FTA 교역비중 및 체결국가수(무역협회) >

	싱가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칠레
FTA 교역비중('05 발효기준, '03실적)	53.7%	35.3%	19.6%	2.9%	0.5%	66.8%
FTA 체결국가수('05 타결기준, 누계)	25개국	15개국	14개국	5개국	6개국	46개국

* '06. 8 한국의 타결건수는 4건(ASEAN, EFTA 등 경제블럭은 1건으로 간주)

④ 반대론자들은 과거에도 항상 반대 → 그러나 실패한 개방은 없으며, 개방결과 소비자 후생 증대, 기업 경쟁력 대폭 제고

- '70년대말 과자수입 자유화시 '한국 과자산업 다 망한다'
→ 국내제과업계 시장장악, 중국 등으로 수출확대
- '80년대 후반~'90년대초 UR 협상시 '한국 농업 피해 7.8조원'
→ 농업 GDP(경상): ('94) 20.7조원 → ('05) 24.0조원
- '87 영화 직배 허용시 '우리 극장 다 망한다'
→ CJ 등 국내 4대 영화사 국내시장 장악, 극장 문제없음
- '91 바나나시장 개방시 '사과, 배 가격 폭락한다'
→ 후지사과(15kg上品기준): ('91) 2만원→('00) 3만원→('05) 7만3천원
- '96 유통시장 개방시 '국내 유통업계 다 망한다'
→ 월마트, 까르푸 철수, 이마트의 중국진출
- '98 일본 영화 수입 허용시, '한국영화 기반 붕괴'
→ 국산영화 시장점유율 ('98) 25.1% → ('05) 58.7%
- '99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시 '일본 코끼리 전기밥솥이 장악한다'
→ 국산 전기밥솥 국내시장 장악, 대일 수출
- '02 GM 대우 매각 추진시 '대량 해고 우려'
→ 복직 및 고용 증대('02.10. 11.6천명 →'06.2. 18.6천명), 수출증대
- '03 한-칠레 FTA 협상시 '과수산업 피해 6천여억원'
→ ('03대비'05) 국내시설포도 가격 9% 상승

2 왜 하필 미국인가?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①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

○ 미국 수입시장 규모: 1.7조불 > 일본+중국+아세안 1.5조불

* 세계수입시장 점유율('04년): 미국(21.8%), EU(역외 18.3%), 중국(8.0%), 일본(6.5%), 캐나다(4.0%)

○ 우리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감소 추세 → FTA로 반전 도모

* 미국 시장점유율('95→'05, %): (중국) 6.1→14.6, (일본) 16.6→8.3, (한국) 3.3→2.6

* 전년대비 각국의 대미수출증가율('05, %): (한국) △5.2, (중국) 23.8, (일본) 6.6, (인도) 20.9

② FTA에서도 일본을 뒤따라 갈 것인가?

○ 일본, 중국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면 우리의 입지 약화

→ 우리(역외국)의 대미 수출은 일본과 중국(역내국)에 의해 대체

○ FTA는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뒤늦게 한-미 FTA 추진시 언제 가능할 지 모르며, 체결된다 할 지라도 현재보다 불리한 조건 감수 불가피

· 멕시코 사례: 일본과 FTA체결후 우리의 FTA체결 제안에 미온적

③ 한-미 FTA의 후광 효과

○ 국내제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

* 칠레의 경우 미-칠레 FTA 발효('04.1) 이후 국가신용등급 상승 (A- → A)

○ 한-미 FTA 출범후, 호주·뉴질랜드, EU, GCC(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다수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 가능성 타진

④ 한-미 FTA보다 한-중 FTA를 먼저 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시장의 선점을 위해 한-중 FTA 필요
- 다만, 취약 부문인 농업이 걸림돌
 - 지리적으로 가까워 미국으로부터는 불가능한 신선 농산물까지 수입 가능 → 농업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
 - 단계적으로 개방에 노출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추진
→ 한-칠레 FTA, 한-미 FTA, 한-중 FTA 순으로 추진

⑤ 이러한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우리가 한-미 FTA 제안

- 정부는 그간 미 의회와 정부, 업계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추진
- 미국과 FTA체결을 희망한 25개국중 미국은 우선적으로 우리와 FTA 추진

⑥ 한-미 FTA 협상은 우리의 선택권을 넓힌 것

- 협상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양국간 이해가 균형되지 않으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
- 과거 BIT 협상도 우리측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나,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중단된 사례

3 왜 졸속으로 추진하나? 꼭 내년초까지 타결되어야 하나?

- ①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03년부터 대외전략 차원에서 준비
- '03.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
 - 대외경제위원회(7차례), 대외경제장관회의(3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의(6차례) 등을 통해 협상가능성, 전략 및 예상쟁점 점검
 - 양국간 투자협정(BIT) 협상과 한-미 FTA의 효과 연구 등을 통해 양국 관심사항 등에 대한 많은 분석과 이해가 축적

- ② 피해부문에 대한 대책은 이미 상당부분 마련
-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계획) 기수립 · 추진중
 - 한-칠레 FTA에 대해 실제 피해이상으로 지원중
 - ※ '03대비 '05년 칠레산 농산물 총 수입증가액 73백만불(약 750억원) vs 지원액 2,665억원
 - FTA 지원특별법,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FTA 이행지원 기금 규모는 '04~'10년간 1조2천억원
 - 생산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8,592억원, 폐업지원 및 소득보전 직불 등 경영안정에 3,188억원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주요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지원원칙	FTA이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력제고, 구조조정, 경영안정
지원대상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지원내용	- 영농·영어 규모 확대,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촉진,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유통촉진, 품종개발·보급 등 경쟁력 제고 -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폐원지원금 - 생산자단체의 구매비축 및 가공지원 - 농수산물가공업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재 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농업) 1.2조원, 수산발전기금(어업)

<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원 인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대상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기업: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경영자금융자, 경쟁력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근로자: 고용관계법 활용하여 전직지원
재원조달	일반회계, 기존 기금(중산기금, 고용보험기금) 활용

③ 중국과의 FTA를 먼저 해야 한다는 보고서 관련(심상정 의원 공개)

- 제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시('04.11.6) 3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소개
 - 산업연구원(KIET): 미국보다 중국과의 FTA 중시
 - * 제조업에 중점을 둔 산업전략을 우선시한 측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보다 미국과의 FTA 중시
 - 무역연구소: 한-미 FTA 필요성 강조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3차회의시 보고하도록 조치
- 제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시('04.12.16) 4개 연구기관(KIET, KIEP,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공동평가결과 보고
 - '미국-ASEAN-중국' 순의 FTA 추진 권고

④ 미국 일정에 쫓겨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

- 미 행정부는 협상촉진권한(TPA)의 시한을 감안하여 조속한 타결 희망
 - * 미 행정부는 협상촉진권한 시한('07.6월말) 3개월전에 협정 체결의사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07.3월말이전에 협상 타결 필요
-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

4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은 잘못을 인정한 것인가?

- ① 소위 4대 과제는 한-미 FTA와 연관 짓지 않더라도, 어차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한미간 통상현안
- ② 한-미 FTA 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미측과 협의, 그러나 내용상 원칙에 벗어난다거나 불합리한 양보를 한 바 없음
 - ① (스크린쿼터 문제) 우리 영화의 자립여건이 성숙되어 축소
 -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논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약속
 - ※ '99.1월 및 '00.12월 국회가 “스크린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시 한국 영화 점유율이 40%가 되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음
 - ②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입가능 여부를 1년여에 걸쳐 검토
 -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 * '03년 수입량의 67%에 해당하는 갈비를 포함한 뼈 일체와 햄버거 고기·내장·안창살·제비추리 수입금지
 - 주요 국가의 수입재개 발표시기와 비슷
 - * 수입재개 발표시기: 대만('05.4), 일본·홍콩('05.12), 싱가포르·한국('06.1)
 - ③ (자동차배출가스 기준문제) 심각한 교역불균형('04 대미 자동차수출 101억불, 수입 1억불 상황)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결정
 -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2006.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결을 더 이상 늦추기 곤란
 - 미측에만 특혜를 준것이 아니고, 내외국 차별없이 1만대 이하 판매자에 유예기간을 2년간 추가로 연장
 - 우리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님
 - * 자동차번호판 관련 양자 현안도 유사한 방식으로 2005.6월 타결

④ (의약품 문제) FTA 협상 출범 이전까지는 기존 약가제도를 변경시키지 말아달라는 미측 요구에 대해 당시 관련 계획이 없어 동의하였다가 추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제도 변경을 추진 중

○ 복지부는 5.3 「약제비 적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시행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 진행 중

○ 미국과는 미측이 포지티브 방식(positive listing system) 도입을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기로 합의

5 미국은 정보 공개 하는데 우리는 왜 안하나?

① 미국의 정보 공개도 제한적

- 무역대표부(USTR)는 일반국민에게 협상내용을 미공개
 - 홈페이지에 협정문 초안, 1·2차 협상내용은 게재하지 않고, 협상 의향 공포(2.2), 미수석대표 연설문 등 일반적인 자료만 게재
- 미 의회에 대한 공개도 제한적
 - 의회 전체 공개가 아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 제한된 그룹에게만 허용
 - 엄격한 비밀유지의무가 따르고 위반시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공개

② 어떤 국가도 협상과정을 '일반국민에게' 그대로 다 공개하지는 않음

- 협상 진행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할 경우 우리의 전략이 모두 공개되고 상대방에게 이용되어 국익을 저해
 - 협의중인 협정문안을 공개한 사례는 FTAA(미주자유무역지역협정) 협상이 유일
 - 그나마, 협상 참여국 34개국중 누구의 제안인지 명시하지 않고 공개
- 국민의 알 권리와 협상의 비공개 필요성간에 적절한 조화 필요

③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

- 전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대통령이 보고받은 수준으로 공개
- 지난 달 구성된 국회특위를 통해 정보공개 범위 및 기준 마련(8.23)

④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상절차법은 문제

- 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헌법 제 73 조), 주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헌법 제60조 제1항)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협상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야 함
- 통상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인정하되, 국회의 건설적인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 참고 > 외국의 협정문안 공개 사례

① 다수의 외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FTA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이나 세부 협상전략을 공개한 사례는 FTAA 협상이 유일

* FTAA(미주자유무역지역): 북미와 중남미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미주 34개국에 참여하여 출범한 FTA 협상 (현재 협상 무기한 중단 상태)

- '94년 협상 개시, '01년 각료회의 결정으로 협정문 초안을 공개

- 34개국이 참여한 FTAA의 경우에는 NGO등의 요구에 따라 협상 참여국간 합의로 협정문 초안을 공개한 바, 이는 매우 예외적 사례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항별로 제안국을 명시하지 않고 제안을 괄호안에 넣어 열거하여 공개함으로써 협상에서의 영향을 최소화

- 제안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국을 쉽게 알 수 있는 소수국간 협상에서는 협정문 초안을 공개한 사례가 없음

< 참고 > 통상절차법 논의 동향 및 문제점

① '06.2.2 의원 41명(열린우리당 24명, 한나라당 6명, 민노당 9명, 민주당 2명) 발의, 현재 통외통위 계류중

② 상기 통상절차법안의 주요 내용

- 조약추진 전 국회 사전 동의 및 조건 부과, 가서명 직후 국회동의 및 재협상 요구, 국회의 정부협상단 추천, 모든 통상조약의 국회동의 의무화
- 통상관련 기본계획(3년)·실천계획(1년)·협상전 산업별 상세 영향평가/보완대책 국회보고, 행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국회추천, 자문위원회 자료 요구시 정부의 거부 불가,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등

③ 문제점

○ 위헌 소지

- 헌법 제73조의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구분한 삼권분립원칙에 위배 (헌법학계의 다수 입장)
- 행정부의 협상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
 -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충분히 규율 가능
 - 대외공개에 따른 국익 배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관행에 위배

II. 분야별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

1 농업은 피폐될 것이다?

① 국내 농업의 위치

	'90	'95	'00	'05
○ 농업 GDP(조원)	13.0	19.9	21.7	21.1
(GDP 비중, %)	7.8	5.5	4.2	2.9
○ 농가인구(천명)	6,661	4,851	4,031	3,433
(총인구중 비중, %)	(15.5)	(10.8)	(8.6)	(7.1)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11.5	16.2	21.7	29.4('04)
○ 60세 이상 경영주 비중(%)	31.3	42.3	51.1	59.2('04)

② 예상 피해

- ① UR협상 결과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이미 상당히 개방
 → 한-미 FTA 체결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산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상당할 전망

- '05년 농식품 수입액: 119억불(대중 수입액 22.2억불, 대미 수입액 22억불)

'05년 기준	옥수수	밀	대두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 총수입(억불)	12.2	6.8	4.0	1.6	7.4	6.2
· 미국산(억불)	3.1	2.6	2.4	1.3	0.04	1.4

- ② 쌀을 제외할 경우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04년 농업생산액의 90% 수준인 37개 품목대상 분석결과)

- 신선도, 미국내 생산여건, 가격·품질차 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 배추, 마늘 등 19개 품목, 전체 생산액의 28.2%

- 품질·소비자 선호 등에 따른 시장차별화로 경합·공존 가능 품목: 돼지, 한육우, 감자, 양파, 사과 등 13개 품목, 생산액의 33.5%

- 큰 가격차로 경쟁력이 없는 품목: 미곡, 보리, 콩 등 5개 품목, 생산액의 28.7%

⇒ 미곡을 제외할 경우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액 비중은 2.0%

※ 주요 수입품목인 옥수수, 밀은 이미 대부분 수입에 의존

- ③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 쌀을 제외할 경우, 농업생산 감소액은 약 8천억(관세 50% 철폐시)~1조 8천억원(관세 즉시 철폐시) 수준
 - * 8천억원은 2004년도 전체 농업생산액(36조원)의 2.2% 수준

⇒ 피해규모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변화

- 전통 농업분야는 FTA와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진행
 - 피해발생시 최대한 보상
 - 경영주 노령화로 생산성 향상 제약 → 국가가 지원
- 기술농업분야는 FTA파고를 극복 가능
 - 수 억원대 매출 농가가 많다!

< 성공 사례 >

- 충남 천안의 이종우씨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200ha에 벼를 재배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터넷 판매를 통해 연간 1억5천만원의 순수익 실현
- 전남 해남의 정운천씨는 ‘참다래 유통사업단’을 설립, 고품질 생산과 유통망 확보를 통해 한-칠레 FTA 등 수입개방에도 불구하고 참다래 산업을 지속 성장시키고 있으며(180억원 매출), 다이어트용 고급 고구마 개발로 새로운 시장 개척(100억원 매출)

3 FTA에 대비한 농어촌·농어업 대책

- ① 이미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04.2)· 지원
 -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직불제 예산 대폭 확충 등으로 당초 계획 초과 예상
 - '04~'06년간 29조 6천억원 예산확보(계획 28조 9천억원 대비 102.4%)
 - * 직불관련 예산: ('05) 1조원 → ('06) 1조 9천억원(농림예산의 23.6%)
 - 한-칠레 FTA 기금도 '04~'05간 2,665억원을 지원('06계획: 1,993억원)
 - * '03대비 '05년 칠레산 농산물 총 수입증가액 73백만불(약 750억원) vs 지원액 2,665억원

② 농어가 인구감소로 1인당 재정지원액은 크게 확충

* 1인당 지원액(천원): ('95년) 2,076 → ('00년) 2,758 → ('06년) 4,144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근로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복지프로그램이 다수

* '06년 예산: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 1,359억원,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673억원, 영육아 양육비 384억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700억원

④ UR협상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부채 증대 등 농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① 도농간 소득격차는 고령화·생산성 차이로 UR과 관계없이 과거에도 확대

* 도농 소득격차(가구당, 도시가구대비 %): ('85) 113 → ('95) 95 → ('05) 78

○ 최근 농가 고령화 현상으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으나 40~50대 농가의 경우 도시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음

< 농가소득 비율(%) >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86	96.4	96.8	82.8
· 비농어가 ¹⁾ 대비	90.6	104.6	106.9	108.1

1) 전국가구중 농어가 제외

② 농가부채 문제

○ '05년 농가부채는 전국 가구당 평균 부채보다 적음

* '05 전국 가구당 평균부채(추정치, 가계신용/가구수): 32.6백만원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 27.2백만원

○ 일부 농가부채는 국가의 저리 융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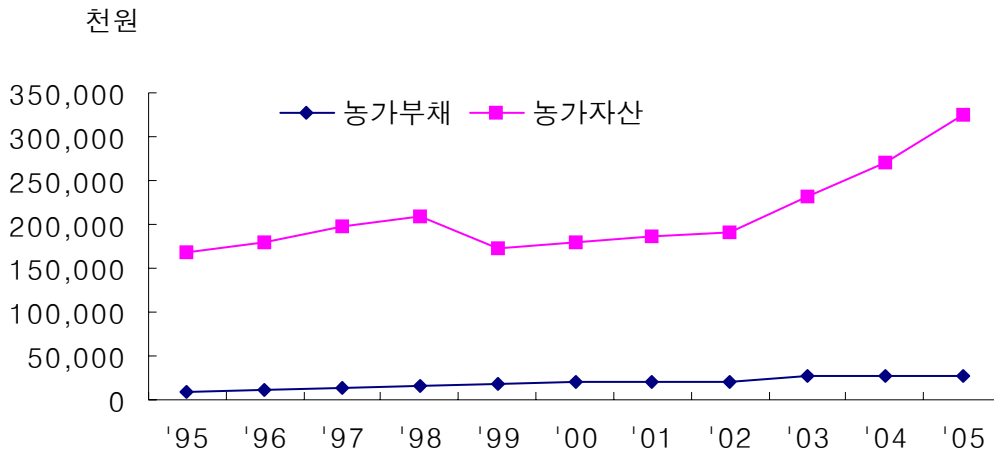
* '05년말 정부의 융자 잔액: 16조원 수준, 평균 대출 금리 3%

○ 동 기간중 농가자산 증가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가구당 농가부채 및 농가자산 비교 >

	'95(A)	'00	'05(B)	B-A
· 농가부채(천원)	9,163	20,207	27,210	18,407
· 농가자산(천원)	158,171	159,975	298,178	140,007

농가부채 및 자산 추이



○ 농가부채중 농업과 관계없는 순수 가계대출(예: 학자금 대출 등)도 상당부분 존재

- '05년 농가부채의 40%가 '농업용 이외 부채'

* '05 가구당 농가부채 구성: 농업용 16.3백만원(59.9%), 비농업용 10.9백만원(40.1%)

< 참고 > 한-칠레 FTA의 농업에 대한 영향

① 한-칠레 FTA 발효('04년)이후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은 크게 증가

-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FTA 발효 이전인 '03년 52백만불에서 '05년도에는 125백만불로 2년간 140% 증가(73백만불 증가)
- 칠레산 농산물 수입은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 4개 품목이 수입액의 96% 차지('05)

<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 증가율 >

	<u>칠레산('05/'03)</u>	<u>전체('05/'03)</u>
· 포도	40% 증가	33% 증가
· 포도주	297% 증가	48% 증가
· 키위	355% 증가	137% 증가
· 돼지고기	166% 증가	305% 증가

② 칠레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포도 및 키위의 경우, 국내수요 증가에 힘입어 국내생산과 가격 모두 상승

	<u>생산량('05/'03)</u>	<u>가격('05/'03)</u>
· 포도	1.3% 증가	13% 상승
(시설포도)	(13% 증가)	(9% 상승)
· 키위	42% 증가	31% 상승

- 포도주의 경우 프랑스산 포도주 등의 수입을 상당히 대체

* 칠레산 포도주 시장점유율: (FTA 발효 1년전) 10.2% → (2년후) 20.5%
 프랑스산 포도주 시장점유율: (FTA 발효 1년전) 65.7% → (2년후) 38.1%

- 또한 포도주 수입 증가는 위스키 수입을 대체

→ 금액상으로도 이익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기여

* 포도주 수입액(백만불): (FTA 발효 1년전) 37 → (2년후) 49: +12

* 위스키 수입액(백만불): (FTA 발효 1년전) 1,799 → (2년후) 1,381: △418

○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수입 자체가 급격히 늘었으며, 칠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

③ 한-칠레 FTA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과수원 폐원 지원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수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 한-칠레 FTA 기금도 '04~'05간 2,665억원을 지원('06계획: 1,993억원)

* '05년 칠레 농산물 수입액은 125백만불로 '03대비 73백만불(약750억원) 증가하여 지원규모가 수입증가 규모보다 많음

- 포도, 키위 등의 과수작목 교체에 따른 간접적 피해까지 감안하여 한-칠레 FTA와 직접 관련없는 사과·배·복숭아 과수원 등도 지원

2

제조업의 혜택도 크지 않을 것이다?

①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치

- 부가가치('05년): 204.2조원(GDP비중 28.4%)
- 제조업 취업자수('06.7): 418만명

② 한-미 FTA 체결시 영향

- 한·미간 산업구조는 상호 경쟁적이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내산업의 발전 기대
 - 특히, 미국시장에서 일본, 중국을 따돌리는 효과
- 주요 수혜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의류, 가죽 제품 등이며, 일부 의약품이 비교열위업종으로 평가

③ 미국은 관세가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해도 우리에게 별로 유리한 것이 없다?

- 미국시장은 크고 경쟁적 → 1% 인하라도 효과가 큼
(예) '05년 자동차 대미수출 71만대(106.2억불), 대미 수입 5.5천대(5.14억불)
* 출처: 무역협회
- 수량적 효과 분석이 어려운 비관세장벽 완화, 반덤핑 규제 자제 등에 따른 효과도 상당 예상
 - 대미 비즈니스 애로요인('06.4 무역협회): 통관 및 위생검역(42%), 기술장벽 등 비관세 장벽(19.9%)
 -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 반덤핑 규제의 주요 대상국
 - 기술이전 촉진, 우리상품의 대외신뢰도 상승 효과 등 수반
- 관세철폐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자동차 등 미국 현지공장 진출 속도 조절 및 전략적 진출 → 국내 산업 공동화 효과 완화
* 우리나라의 미국내 현지생산 규모(추정치): 자동차 30억불, 반도체 3억불

④ 대기업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본다?

- FTA에 따른 관세철폐시 중소기업 영역인 섬유, 신발, 가죽, 생활용품 등의 대미 수출 증가 예상
 - 이들 분야의 미국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 평균 관세율: 섬유 및 의류 10.9%, 고무제 장갑 14%, 가죽 가방 및 핸드백 12.6~20%, 신발·모자·기타 잡화 11.1% 등
 - 중소기업들도 한-미 FTA에 호의적
 - * 대한상의 620개 기업 설문조사('06.8월)
 - 전체기업의 65.8%가 한미FTA 찬성(대기업 67.2%, 중소기업 65.2%)
 - 한미FTA타결시 국내경제 호전될 것(74.5%)
 - * 전경련 380여개 기업 설문조사('06.9월)
 - 투자유치 확대에 긍정적(66.7%), 수출증대에 긍정적(66.0%)
 - FTA체결대상 선호도 : 미국(43.7%), 중국(23.4%), 일본(7.9%), EU(6.3%),
 - * 산업연구원의 1,19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상기업의 52.1%가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 응답(부정적 응답 12.5%)
 - * '05년 우리나라 총 섬유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율은 17%였으나 한·미 FTA 체결시 약 20%까지 상향 전망(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우리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 발생

< 한-미 FTA에 대한 제조업계 입장 (무역협회, 2005.3) >

산업	수출증대	수입증대	수입전환	국내피해	업계입장
자동차	◎	△	X	X	적극 찬성
기계	○	○	○	△	-
석유화학	△	△	X	△	찬성
의약품	△	◎	△	◎	적극 반대
섬유·의류	◎	X	X	X	적극 찬성
전자	◎	△	△	X	적극 찬성
철강	△	△	X	X	찬성
고무제품	◎	△	X	X	적극 찬성
가죽제품	◎	△	X	X	적극 찬성
신발·모자류	◎	△	X	X	적극 찬성

* ◎: 매우 큼, ○: 큼, △: 영향 미미, X: 거의 없음

3 국내 제약산업이 몰락할 것이다?

① 국내 의약품 산업의 위치

- 제약산업 생산액('04): 9조 6,374억원(GDP 대비 1.24%)
 ※ 시장규모 83억불(세계시장규모 5,180억불의 1.6%, 미국 시장규모 2,480억불의 3.4%)
- 의약품 수·출입 규모('04)
 - 수출: 1,086백만불(대미 수출 108백만불 10.0%)
 - 수입: 3,246백만불(대미 수입 517백만불 15.9%)
- 제약업체수 802개사, 종업원 약 59,802명('04)

② 예상 피해 및 긍정적 효과

-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특허가 있는 의약품의 후발의약품 허가를 금지하고,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시 국내산업에 영향
 - 복제의약품 및 개량신약 시판 지연에 따라 매출 감소 예상
 - 개량신약 및 제네릭 개발 업체는 수익성 및 투자여력 감소
 - ※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에 부담이 되나,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신약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원료의약품은 이미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 완제의약품의 경우, 가격보다 효능에 좌우
 - * '05년 의약품 관세율 평균: 한국 5.3%(완제의약품은 8%), 미국 2.2%
- 반면, 우리측이 요구한 우수의약품생산및품질관리기준(GMP) 등을 상호 인정하는 경우 국내의약품 대외 신뢰도 제고 등으로 수출이 확대(GMP 상호인정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 정밀 계량화 작업중)

③ FTA에 대비한 의약품 대책

-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가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
- 관세 조기철폐로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의 유예기간 확보 노력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공정(GMP) 상호인정 추진, 개량신약 개발 등을 위한 R&D 집중투자, 국내의약품의 미국 FDA허가취득 지원

4

서비스산업도 종속될 것이다?

- ① 금융, 유통, 경영 컨설팅, 여론 조사, 전시대행 서비스 등 많은 분야가 이미 상당부분 개방
- ② 언어와 문화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의 일부분
→ 외국 서비스업체의 현지 장악이 쉽지 않음
* 예: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 철수
- 또한 금융, 통신, 법률, 컨설팅,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
→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보일 부분은 많지 않음
- ③ 미국기업 진출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
-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최고 경영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전문인력 고용*이 불가피
* 외투기업의 모기업에서 파견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
- 상품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기술·노하우, 자본, 사람이 따라서 이동하는 특성 → 학습효과 등을 통해 국내 업체의 발전 촉진
- 서비스업은 제조업 분야보다 학습시간이 짧아 단기간내 경쟁 가능
- 법률, 연구개발, 컨설팅, 디자인 등 많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향상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 고급서비스가 제공되면, 교육, 의료 등에 있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가 국내로 전환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1~6
유학·연수 지급 (억불)	9.6	10.7	14.3	18.5	24.9	33.7	19.5
(증감율)	(5.5)	(11.5)	(33.6)	(29.4)	(34.6)	(35.2)	(25.8)

* 출처: 한국은행

5 스크린쿼터 축소로 우리문화가 죽는다?

1] 영화산업의 위치('05년)

- 한국영화 매출액 5,277억원, 수출액 76백만불(약 760억원)
 - * 극장매출(한국영화+외국영화): '05년 8,981억원
 - * 시장규모(극장매출 + 비디오 · DVD매출): 14,764억원
- 한국 영화산업 종사자: 약 17,500명

2] 반대론자들은 한국영화산업규모 2조 6,248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스크린쿼터 1일 축소시 약 328억원, 50일 축소시 약 1조 1,995억원의 피해 주장

3]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유지하더라도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01년 이래 50%대 점유율을 유지
- '98년 대비 매출액은 8.4배, 수출은 20배 이상 급격한 신장세

구 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영화점유율(%)	25.1	50.1	48.3	53.5	59.3	59.1
한국영화 매출액(억원)	629	2,609	3,068	3,823	5,048	5,277
한국영화 수출액(천불)	3,074	11,250	14,952	30,979	58,284	75,995

※ '99.1월 및 '00.12월 국회가 “스크린쿼터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시 한국 영화 점유율이 40%가 되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음을 고려할 필요

4]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문화가 죽는가?

- 영화는 우리 문화의 일부분으로 다른 장르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출판)에 비해 상업성이 매우 강함

- 상업성이 약한 순수 영화는 국가에서 지원
 - * '06년 예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25.8억원, 예술영화 제작지원 24억원, 독립영화 제작지원 14억원
 - 세계에서 스크린쿼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자국영화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1개국에 불과
 - * 한국, 베네수엘라, 스페인, 스리랑카, 파키스탄,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스, 이집트,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 이들 나라들만 문화 선진국인가?

⑤ 참여정부가 영화 산업을 죽이는가?

-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논의
 -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비해 '98년부터 5년간 영화진흥금고 육성 (총 1,670억원)
- 문화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도 설치
 - '99년 설치하여 '06년 현재 총 2,700억원 조성 및 운용
-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흑시라도 발생 가능할 영화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설치
 - ※ 영화발전기금 : '07~'11 5년간,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 (국고 출연 2,000억,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 2,000억)

⑥ 과거 영화직배 추진시 반대론자들은 우리 영화관 다 죽는다고 주장, 지금 어떠한가?

- 현재 국내 4대 영화사(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롯데시네마)가 국내 배급시장을 장악
 - * 영화배급시장 점유율('05년): 1위 CJ(21.9%), 2위 쇼박스(19.8%)
 - * 한국배급사 관객점유율('05년): 70.2%

6 방송개방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1 방송산업의 위치

- 방송시장 규모('04): 7.8조원
- 지상파 방송 46%, 유선방송 18%, 위성방송 3%, 방송채널사용사업 33%
- 방송산업 종사자수('05.6): 약 30,500명

2 방송사업의 주요 규제(미국측의 예상 관심사항)

- 방송쿼터의 철폐 또는 완화
 - 현재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지상파 80% 이상, 종합 유선방송 50% 이상
 - 애니메이션 25%, 영화쿼터 45%(지상파), 35%(기타)
-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 현재 지상파 방송은 외국인 투자 금지
 - 종합유선 방송(49%) 및 위성 방송(33%)에 대해 투자한도 제한
- 외국방송 재송신 규제 철폐
 - 현재 가공되지 않은 외국방송은 유료방송채널의 20% 범위내로 하고, 우리말 더빙(dubbing) 및 지역광고 금지

3 기체결한 FTA에서도 개방하지 않았으며, 미국측은 영향력이 가장 큰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관심표명 없음

- 한-칠레 및 한-싱가폴: 방송산업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양허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보(Negative system)
- 한-EFTA: 양허하지 않음(Positive system)

- ① 미국은 현재 사실상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 등 테스트 시장에 대해 관심
- 인터넷 등 원격교육서비스와 테스트 서비스에 대해 별다른 정부 규제가 없는 현 상태가 지속됨을 보장받기 원하는 것으로 추정
- ② 반대론자들은 공교육 붕괴 및 사회양극화 심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
- 외국계 영리학교법인 설립으로 교육비 폭등과 공교육 붕괴초래
 - 대학들이 수능성적과 함께 입학전형자료로서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초중등 교육이 미국의 테스트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 우려
- ③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수준의 개방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
- 미국도 1차협상시 비영리 학교법인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음을 표명
 -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 공교육의 근간인 초중등교육은 미개방 원칙하에 대응(미국도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
 -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비영리를 기본으로 하는 사립학교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불허
- ④ 다만, 대학 및 성인 교육의 경우, 우리의 필요에 의한 개방은 추진
-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따라서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50위권 대학이 전무
 - * The Times('05): 북경대 15위, 동경대 16위, 싱가포르국립대 22위, 서울대 93위

- 유학·연수 경비: '05년 33.7억불
- 고등교육 개방시, 경쟁촉진을 통해 대학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유학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우수 외국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므로, 소비자 후생 향상
 -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개혁,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고등교육국제화 방안 등 추진 중
-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테스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을 통해 미측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① 반대론자들의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

- * 우석균(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맹장수술이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
- *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약값이 1년뒤 최소 8천억, 10년뒤 8조원으로,
1년뒤 한가구당 다국적 제약사에 추가지불할 약값이 65만원

②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임

-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기본적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반드시 유지

③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은 미국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

- 그간 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쟁점화한 적이 없는 사안
- 미국이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크지 않음
 - * 가격수준(미국과 한국의 의료가격수준은 9배 이상 차이) · 지리적 접근성 · 제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크지 않음
- 설령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미측이 제기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

9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①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로 연결

- '05년 외국인투자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 부문 국내 고용비중은 '00년 7.3%에서 '03년 8.7%로 증가

※ '00~'04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는 5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256만명)의 20%에 달함 ('06.2, LG 경제연구원)

-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비중은 4.3%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산업내 비중('03년)>

구 분	제조업			주요서비스업		
	외투기업	국내산업	비중(%)	외투기업	국내산업	비중(%)
매출(조원)	82	596	13.7	33	394	8.3
고용(천명)	190	2,192	8.7	85	1,976	4.3

주: 1. 제조업: 외국인투자 규모가 작은 업종(담배, 목재, 출판인쇄, 기타 운송장비, 가구) 제외
 2. 국내산업: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매출) 노동부 5인 이상 종사자(고용) 기준

- 투자국별로 비교해 볼 때 미국에서 투자한 업체의 평균 고용인원이 661.8명(일본 234.8명)으로서 가장 고용규모가 큼

- * 외투기업의 모기업에서 파견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5%에 불과
- * 선진국·개도국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NAFTA체결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는 고용증가, 실업률 감소

<NAFTA 체결 후 고용변화 추이 (%)>

	1994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67	70.8	71.4	72.2	72.5	72.5
한국	62.8	62.1	63.3	63	63.6	63.7
멕시코	58.7	60.1	60.1	59.6	60.8	59.6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② 부실기업 M&A 이후 정리해고 문제는 인수자가 기업희생,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

- GM대우의 경우 '02.10월 국내진입 후 매출향상으로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등 노사·고용의 새로운 모델 창출함

* '01.2월 해고 근로자 1,700여명중 복직희망자 전원 복직완료('06.5월), 시설 투자 확대 및 수출호조로 고용규모 증가('02.10월 11,610명→'06.2월 18,577명)

- 최근의 사례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승계의 조건으로 한국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있음

Ⅲ. 기타 쟁점

1 쌀 제외가 가능한가?

① 쌀 제외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

- 미국은 모든 상품이 협상대상이며,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② 과거 미국도 제3국과 체결한 FTA에서 자국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받은 사례

(예) 미국-호주 FTA (2004년)

- * 관세철폐 예외: 설탕
- * 수입쿼터 설정: 쇠고기, 낙농품, 땅콩, 연초, 목화, 아보카도, 포도주 등

③ 쌀이 우리의 초민감 품목임은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상황

- '04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당시, 미국도 쌀 관세화 유예에 동의
- 쌀이 WTO 농업 협상에서 인정받은 특수한 지위, 다른 FTA 협정에서의 전례를 활용하여 쌀 제외를 설득시킬 것

2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왜 허용하려 하는가?

①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협정에서 일반적

- 우리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81개의 투자보장협정(BIT)에 포함
- 미-호주 FTA 등에서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있음

【 FTA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가 제외되어 있는 사례 】

<미·호주> 양국이 동일한 영미법 체계여서 투자자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양국간 법체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호주가 협상과정에서 미측에 농업 등의 다른 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해 주었기 때문

<EU> EU가 체결하는 FTA에서 분쟁해결절차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EU 집행부가 동 정부를 대리하여 중재절차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EU의 독특한 법적 성격에 기인하기 때문

②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

- 자국 투자자의 보호 필요성은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큼
 - 우리의 GDP는 미국의 1/16수준이나, 대미 투자는 14억불로서 미국의 대한 투자의 절반수준
 - * '05년 미국의 대한투자: 27억불, 한국의 대미투자: 14억불 (2 : 1)
 - * '05년 미국GDP: 12조 5천억불, 한국GDP: 7천875억불 (16 : 1)
- 개도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시 선례
 - 현재 진행중인 한·중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에서도 동 제도의 포함을 강력히 요구
 - * 2만개 우리 기업의 320억불 대 중국 투자

③ 미국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남용의 우려는 지나친 것

- NAFTA 지역에서 미국투자자의 정부 제소비율이 높은 것은, 미국 투자가 캐나다나 멕시코의 투자보다 훨씬 많은 데 기인
 - * NAFTA지역에서 제기된 총 44개 사건 중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 경우는 27건
 - * NAFTA체결이후 투자규모(UNCTAD)
 - 미국('95~'03)의 대 캐나다 및 멕시코 직접 투자: 1,839.7억 달러
 - 캐나다('95~'03)의 대 미국 및 멕시코 직접 투자: 74.6억 달러
 - 멕시코('95~'02)의 대 미국 및 캐나다 투자: 40억 달러
- NAFTA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요구가 수용된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투자자의 제소가 기각되거나, 중단·보류된 경우가 대부분
 - * NAFTA 체결 이후 제기된 44건의 분쟁중 투자자가 보상받은 케이스는 5건

3

NAFTA로 멕시코와 캐나다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① 한-미 FTA 반대론자는 멕시코('94년 발효), 캐나다('88년)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NAFTA의 탓으로 전가

- 비판의 핵심인 빈곤층의 증가나 사회 양극화는 세계화·정보화·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상
(지니계수: 0~1)

국 가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	2000/2002년
미 국	0.326	0.351	0.346
캐 나 다	0.286	0.287	0.305
멕 시 코	0.451	0.520	0.480
영 국	0.277	0.304	0.319
일 본	0.276	0.290	0.310
독 일	0.254	0.270	0.272
OECD 평균	0.266	0.284	0.291

* 출처: OECD

- '95년 멕시코의 외환위기도 NAFTA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멕시코내 정치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

② 방송(KBS 스페셜, MBC PD수첩)의 NAFTA비판에 대해

< 멕시코 관련 >

- 주한멕시코 대사의 매일경제신문 기고('06.7.14, 매경 기고)
 - KBS와 MBC의 방송과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 대부분 멕시코 일부에 해당되는 문제이거나 사실이 아님
 - 양극화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로 NAFTA와는 관계가 없음
 - NAFTA 발효 전에 농업부문 붕괴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 품목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 '94~'05까지 대미 농산물 수출 거의 300%증가

- 카스텐스 IMF 부총재(전 멕시코 재무차관)의 연합뉴스 인터뷰 ('06.8.20)
 - NAFTA는 멕시코 경제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
 - NAFTA체결은 대미수출 3배이상 증가,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제품의 질 향상· 가격 하락 등 국민에게 큰 혜택을 줌
- ※ 국민의 64%가 NAFTA에 찬성('04년 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와 국제문제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 캐나다 관련 >

- 프레이저 연구소 프레드 맥마헌 통상 및 국제화 담당국장 ('06.7 국정브리핑 기고)
 - 성공적인 무역협정이 반시장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왜곡되고 있어 매우 유감
 - 대미무역흑자규모가 미국과 FTA체결전 GDP 2~3%에서 10%수준 (약1,300억 미불)으로 증가
 - 제조업 및 가공업 품목의 수출이 FTA이후 크게 증가, 고소득 제조업 직종에서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
 - 미-캐나다간 목재분쟁 → 캐나다수출의 2~4% 차지하는 예외적 사례이며, NAFTA의 분쟁해결절차는 캐나다에 유리하게 작용
 - * '94~'02간 EU는 캐나다의 5배, 일본은 2배가 되는 무역분쟁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EU는 7배, 일본은 6배가 되는 불공정 무역 판정을 받음
 - 벤쿠버 노숙자증가 → 주정부와 시정부가 마약사용에 관대하고 노숙자에게 돈을 쏟아 붓는 진보성향에 기울여 있는 탓
 - 시간제 근로자 증가 → 정규직과 시간제 모두 증가, 실업률 하락
 - 사회보장프로그램 후퇴 → FTA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서 추진, 결과적으로 빈곤감소 및 취약층의 정부 의존 완화

< 참고 > NAFTA의 대 캐나다·멕시코 효과

①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에 힘입어 NAFTA 체결후 1인당 실질 구매력이 늘어 국민후생이 증가

< 캐나다 및 멕시코의 1인당 구매력* 변화 >

구 분	CUSFTA 전	NAFTA 전	NAFTA 체결 후						한국 (2005)
	1988	1993	1996	1999	2002	2005	증감률 ('88-'05)	증감률 ('93-'05)	
캐나다	18,073불	20,483불	23,073불	26,824불	30,654불	34,550불	91.2%	68.7%	22,666불
멕시코	-	6,883불	7,155불	8,312불	9,066불	10,090불	-	46.6%	

*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실질구매력(GDP based on purchasing-power-parity per capita)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② 특히 멕시코는 NAFTA 전후 상위 10%의 소득 점유가 감소하고 중산층의 소득점유가 증가하여 분배구조가 개선

*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 지표인 지니 계수도 NAFTA 이후 하락: 0.53('92) → 0.51('02)

< 멕시코의 계층별 소득 점유율 변화 >

구 분	NAFTA 전	NAFTA 체결 후						한국 (2005)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증감률 ('92-'02)		
하위 20%	3.5%	3.3%	3.6%	3.1%	3.3%	3.7%	↑0.2%P	10.1%	
중산층	중위 40%	18.4%	17.7%	18.9%	18.2%	18.3%	19.4%	↑1.0%P	28.3%
	중상위 30%	34.5%	34.4%	35.2%	34.2%	34.2%	35.6%	↑1.1%P	38.2%
상위 10%	43.6%	44.6%	42.3%	44.6%	44.3%	41.3%	↓2.3%P	23.4%	

* 출처: World Bank, 『Poverty in Mexico』 (2004)

③ 캐나다·멕시코 모두 NAFTA이후 고용이 우리보다 빠르게 증가

< 캐나다·멕시코의 고용 변화 (1993-2004) >

구 분	NAFTA 전	NAFTA 체결 후							한국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증감 ('93-'04)	2004	증감 ('93-'04)
캐나다	1,286만명	1,334만명	1,374만명	1,445만명	1,500만명	1,572만명	1,601만명	315만명 (↑25%)	2,256만명	332만명 (↑17%)
멕시코	3,134만명	3,294만명	3,623만명	3,759만명	3,832만명	3,971만명	4,127만명	993만명 (↑32%)		

* 출처: OECD (2006)

<참고> NAFTA의 대 멕시코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의 평가

① IMF(How has NAFTA affected the Mexican Economy? Review and Evidence)

□ NAFTA는 지난 10년 동안 멕시코 경제성장에 긍정적 기여

- 연평균 GDP성장률 증가추이: 2%('80~'93)→4%('96~'02)
- '93~'02년 기간 중 전세계 수출액은 75% 증가한 반면, 멕시코의 수출증가폭은 300% 수준
 - NAFTA 출범 후 수출품목 다변화도 더욱 진전
- 국내총투자중 FDI가 차지하는 비율 증가: 6%('93)→11%('02)
 - * FDI 유입액: 120억불('91~'93) → 540억불('00~'02)
- 최근 연구결과*는 NAFTA가 멕시코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 Lopez-Cordova(2002): 10%상승, Schiff and Wang(2002): 5.5~7.5%상승

② World Bank(Trade, Doha, and Development, '05.11.)

□ 멕시코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미국·캐나다와의 경제관계가 밀접해 짐

- '94~'02년간 1인당 GDP는 NA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4% 증가
- NAFTA가 멕시코 농업 황폐화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
- 일자리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빈곤층 비율이 감소
- 미국의 제조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1/2로 감축
- 미국의 경제변동이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에 상당히 영향을 주며, 멕시코의 경기변동성이 완화

IV. 과거 개방 사례

1

비판론자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개방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① 과거 주요 개방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항상 거센 반발에 직면

(예시)

-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시 일본제품의 봇물 수입으로 관련 산업 몰락
- UR시 농촌경제의 파탄
- 칠레와의 FTA 추진시 과수 농가 피해 등

② 개방이후의 경제적 성과는 우려가 지나친 것이었음을 반증

- 농산물 국내 생산 감소량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
 - 실제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은 예상보다 완만히 진행되고 개방으로 피해보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병행
- 오히려 개방은 경쟁력 확보와 수출산업화의 계기로 작용
 - ①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96): 대일수입 핵심품목의 국제경쟁력 확보(휴대폰, 칼라 TV, 전기밥솥 등) 계기
 - ② 유통시장 개방('96): 토종업체의 국내 제패 및 중국시장 진출

③ 더욱이 말없는 다수인 소비자의 후생은 개방을 통해 크게 증대

- 서민들이 개방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상품·서비스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 개방 이전에는 소비자가 비교열위 산업에 보조금을 준 셈

2 개별 사례

가. UR 농산물 협상

(1) 추진배경 및 반대

- ① '86년 UR협상 개시이후 농산물의 예외없는 시장개방, 농업보조금 감축, 수출보조금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93년말 타결
 - 우리는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허용
 -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확보하여 관세감축률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세감축기간은 10년(선진국6년)을 확보
- ② 반대론자들은 농업 및 농촌의 붕괴를 주장하며 극렬 반대
 - 국내 농업 전반에 7조8천억원 피해 발생 추정
 - 정치권, 시민단체, 농민 등이 대규모 반대
 - 일부 국회의원의 제네바 GATT 본부 앞에서의 삭발단식 투쟁, 할복시도 및 단식(한농연 이경해) 등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 대회(3만명참가), 1천만명 서명운동, 쌀개방에 대한 국민투표안 제안, 농기계 반납운동 등
 - 쇠고기, 닭고기 등 일부 민감 품목의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재협상 주장 등 강경
 -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통령 사과 및 농림수산부장관 교체

(2) UR 협상이 농업에 미친 영향

① UR협상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은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 UR 발효('95) 이후 농축산물 수입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

- UR 이후 10년간 수입 증가율(69%)은 그 이전 10년간 증가율(160%) 보다 낮음

· 농수산물수입액(백만불)

	'84(A)	'94(B)	'04(C)	B-A	C-B	B/A	C/B
	2,081	5,426	9,200	3,345	3,774	160%	69%

○ 농업부문 실질 GDP도 작황·질병발생 등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완만한 성장세 유지

※ 농업부문 GDP(경상): ('94) 20.7조원 → ('05) 24.0조원

② 또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42조원 구조개선 사업, 15조원 농특세 사업 등 정부지원도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

※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00년 불변가격 기준)
: ('94) 8,889천원 → ('04) 13,615천원(53% 증가)

③ 시장개방 결과 비교적 잘 적응하였고 특히 관세율이 낮은 축산물은 일정한 자급수준 유지

○ 쇠고기(관세율 44.5→40%) 자급율: ('94) 54.6% → ('04) 44.2%

○ 돼지고기(관세율 37→25%) 자급율: ('94) 97.1% → ('04) 86.9%

○ 닭고기(관세율 35→20%) 자급율: ('94) 100% → ('04) 90%

나. 한-칠레 FTA

(1) 추진배경 및 반대

- ①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된 FTA('03.2 협정서명, '04.4 발효)에서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촌 피해 문제가 부각
 - 협상시 쌀·사과·배는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 포도는 포함
 - 정부는 칠레의 포도 수확 시기가 계절적으로 달라 포도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 * FTA 타결 후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10년간 5,860억원의 피해 예상 (한양대 용역, 2003)
- ② 농민단체, 노조, NGO, 농촌지역구 국회의원은 과수산업의 붕괴를 넘어 농업의 해체를 가져온다고 주장
 - 농민단체: 포도등의 수입 폭증 → 과일가격의 폭락 →과수산업 붕괴 → 농업붕괴
 - 노조 및 NGO: FTA체결 → WTO 농업부문 특별조치 포기 → 공산품에만 치중 → 농업기반붕괴
 - 국회: 농업인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차원의 논의에 치중
- ③ FTA 이행기금을 조성하여 7개년(2004-2010년) 동안 연평균 1,600 억원, 총 1조 2천억원을 집행계획
 - 국회 심의과정에서 8천억원(정부안)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
 - * 국회비준과정에서 당시 농정현안을 FTA 비준과 연계하여 처리: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농특세 기간연장(10년간) 등

(2) 한·칠레 FTA 성과(발효 2년간)

- ① 대칠레 수출증가율은 확대된 반면 수입증가율은 둔화
 - 칠레는 우리의 만성적인 적자 교역대상국으로 협정 발효 전부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발효 후에는 확대 추세 둔화

<한-칠레 교역 동향>

(백만달러, %)

	2003년	'03. 1-8월			'04. 1-8월			증감율		
		1-3월	4-8월	계	1-3월	4-8월	계	1-3월	4-8월	계
수출	517	130	208	338	135	287	422	3.8	38.0	24.9
수입	1,058	244	421	665	463	803	1,266	89.8	90.7	90.4
수지	△541	△114	△213	△327	△328	△516	△844	-	-	-

자료: 농촌경제 제27권 제4호(2004 겨울),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교역 동향과 시사점

○ 우리의 칠레수입시장 점유율은 '03년 3.0%, '04년 3.1%, '05년 3.6%로 꾸준히 상승

- 자동차, 합성수지, 타이어, 철강관, 경유, 자동차부품 등이 수출호조
- 자동차: 1.4억불(발효전 1년) → 2.7억불(발효 2년차, 2배 증가)
- 무선통신기기: 0.2억불(발효전 1년) → 0.9억불(발효 2년차, 3.8배 증가)

○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는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확대 및 국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

※ 발효 후 2년간 대칠레 수입증가액의 85.4%가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

② 농업분야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음(p.16 참고)

다. 영화직배 허용

(1) 추진 배경과 반대

- ①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측의 영화시장 개방 및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요구 등을 감안하여 영화법을 개정('87.7.1 시행)
 - 외국인에게 영화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미국 메이저 영화사들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영화를 직접 배급
 - * 최초 직배영화는 1988년 미 UIP의 '위험한 정사'
- ② 영화계는 '영화인투쟁위'를 구성, 미 직배영화 상영관에 뱀과 염산병 살포, 극장 방화, 점거농성 등 극렬 시위를 전개
 - 미국 직배사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끼워팔기'등을 통해 영화관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아 한국영화의 상영기회 박탈 주장

(2) 영화 직배 허용의 영향

- ① 국내 영화산업의 독과점적 구조와 과보호의 울타리를 철폐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직배로 인한 충격은 단기간에 그침
 - *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88) 25.1% ('93) 15.9%(최저) ('05) 59.1%
 - * 외국직배사 시장점유율: ('89) 10.7% ('93) 26.3% ('05) 25.0%
 -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추세('88년 → '05년)
 - 영화산업 시장규모(극장+비디오·DVD기준, 9,648억→14,764억)
 - 한국영화의 제작편수(상영기준, 80편 → 83편)
 -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의 증가(23.3% → 59.1%)
 - 한국영화의 해외수출 증가(34편 589천불 → 202편 75,996천불)
 - 국내 배급사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작용
 - 국내 배급시장은 국내 4대 영화사(CJ Entertainment,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롯데시네마)를 중심으로 재편
 - * '05년 배급시장 점유율: CJ Entertainment(21.9%), 쇼박스(19.8%)

라. 일본영화 상영 허용

(1) 추진 배경과 반대

- ① '98년이후 일본대중문화 단계적 개방의 일환으로 일본영화의 상영 단계적 허용('04.1 전면 개방)

< 일본 영화 상영 단계별 허용 내용 >

분야	1차 개방 (1998. 10. 20)	2차 개방 (1999. 09. 10)	3차 개방 (2000. 06. 27)	4차 개방 (2004. 01. 01)
개방대상 영화	세계 4대 영화제 수상작	공인 국제영화제 수상작 전체관람가 영화	'18세 이상 관람가' 제외한 모든 영화	전면 개방

- ② 일본영화 상영 허용시 국내영화시장 대폭잠식 우려

(2) 일본영화 상영 허용의 영향

- ① 일본 영화의 국내 시장 잠식은 미미

- '00년이후 연 20편 내외가 개봉되고 있으나, 흥행 성공은 제한적
 - * 국내개봉 일본영화수: ('98)2 ('99)4 ('00)25 ('01)24 ('02)13 ('03)18 ('04)28 ('05)25 ('06상)15
- 일본 영화의 시장점유율(서울관객기준)은 '00년(7.4%)외에는 대부분 3%내외

→ 위기의식이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

< 일본 영화 점유율(서울영화시장 기준) >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6월)
한국영화	21.4%	21.3%	35.8%	32.0%	46.1%	45.2%	49.6%	54.2%	58.7%	59.5%
일본영화	개방전	0.4%	3.1%	7.4%	1.4%	3.2%	2.9%	2.2%	0.8%	2.0%
비고	개방전	1차 개방	2차 개방	3차 개방	-	-	-	전면 개방		-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영화진흥위원회(2005), 「2005년 상반기(1월-6월) 한국영화시장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05) 「2004년도 한국영화시장 결산」

마. 유통시장 개방

(1) 추진배경 및 반대

- ① '83년부터 미국과 EC가 개방요구를 하였으나, 국내유통산업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89년부터 개방
 - '88.10 「도소매업 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개방추진
 - ※제 1단계('89): 기술도입 및 도매업투자확대, 외국지사 규제완화
 - ※제 2단계('91): 10개 점포이하, 매장면적 1,000㎡까지 허용
 - ※제 3단계('93): 20개 점포이하, 매장면적 1,000㎡까지 허용
 - '96.1월부터 일부업종(곡물, 육류, 과일,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는 매장면적 및 점포수에 대한 규제 폐지
- ② 유통시장 개방당시 국내 유통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중소유통업계의 소규모, 산발적 시위 발생
 - 개방당시 84.7%가 상당한 피해를 예상('96.1 LG 경제연구원 조사)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중소유통관련단체의 중소상인 보호결의대회 개최('92.10), 유통시장 3단계 개방의 무기연기 건의
 - 중소상인 가두집회 등 대규모의 조직적인 시위는 없었음
 - * 당시 관련단체의 주 관심은 시장개방보다는 연금매장, 보훈매장 등 저가의 특수매장의 확산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의 위축
 - 외국 유통업계가 자금력, 전문화된 판매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국 제품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할 것을 우려
 - * 대만이 '80년대 후반 시장 개방 이후 일본업계의 진출로 대만의 가전산업이 잠식되었음을 사례로 제시

< 유통시장 개방의 당위성과 반대론 >

개방의 당위성	반대 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을 통한 선진기술과 경영도입 · 경쟁을 통한 유통산업 효율화 · 유통마진 축소와 소비자 상품선택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타격 (자본력, 기술력 취약) · 외국유통업계의 자국제품 수입으로 경상수지 악화(특히 가전)

(2) 개방 성과

① 국내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기여

- 유통업은 '05년 국내총생산(GDP)의 6.2%, 고용의 1/6(248만명)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 외국계 대형할인점 3사(홈플러스, 까르푸, 월마트)는 고용창출에도 기여('00년 9천명 → '04년 19천명)
- 시장개방 후 국내 할인점 업계는 점포수 확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
 - 국내 업체가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업계 1, 3위를 차지
 - ※ 점포수 추이: ('90) 0 → ('96) 34 → ('05) 304개
 - ※ 업계 순위: 1위(이마트), 2위(홈플러스), 3위(롯데마트)
 - ※ 상위 5대 할인점 매장수(개, 2005. 8) : 이마트 73, 롯데마트 40, 홈플러스 36, 까르푸 29, 월마트수퍼센터 16
 - 외국업체는 국내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져 철수 추진
 - ※ 까르푸, 월마트 등이 이마트 등 국내유통기업에 인수·합병 발표
 - 내수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
 - ※ 국내 유통업계의 해외진출 계기(중국에 할인점 10, 홈쇼핑 3 등 13개 진출)
- 유통시장 개방은 경쟁을 통해 국내 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물가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
 - * 대형할인점의 소비자물가 안정효과('96~'99): 총△1.79%, 연평균 △0.45% 추정

② 중소기업 유동업자가 위축되었으나, 이는 개방의 여파보다는 국내 업체의 구조조정이 주요인

- ※ 중소기업 유동업 업체수 (5인미만, 천개): ('96) 706 → ('00) 665 → ('04) 607
- ※ 대형마트(할인점)수(개): ('96) 34 → ('00) 130 → ('04) 274 → ('05) 307

○ 소득향상에 따라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형 유통업체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전망

< 국내 기업형 유통업체의 소매업 매출 비중 변화 추이(단위: %) >

	1997	2004	2009
기업형 유통업체	21.1	41.7	54.9
재래식 유통업체	78.9	58.3	45.1
합 계	100	100	100

※ 미, 일 등 선진국에서 기업형 유통업체 비중은 80% 수준

③ 가전산업의 신상품 및 기술개발 등 자생력 배양

○ TV, 세탁기 등 내수 및 수출주종품목 개발 주력 및 국내유통분야 투자 확대로 기업화·전문화 촉진

* 테크노마트,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규모 양판점 성장 촉진

바.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1) 추진배경 및 반대

① '78년부터 대일무역역조 개선과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입 급증 품목의 수입 규제

※ '78년 자동차, 컬러TV 등 261개 품목 → '81년 924개 품목 → '93년부터 신규지정 없이 단계적 축소 → '99.6월 16개 품목 해제(제도 폐지)

○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통한 국내시장 보호조치 속에 2단계에 걸친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산화시책을 추진

※ 국산화 대상 품목 발굴·고시, 장기저리 융자금(1조 6,800억원) 지원, 우수 품질 인증마크 제도 도입, 기계류 할부 금융회사 설립 등 추진

②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시 전기전자, 기계업종 등 관련산업 위축과 대일종속 심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제도 폐지가 지연

○ 산업연구원은 '95년에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해제되면 향후 3년간 조사대상 189개 품목 중 181개 품목의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

< 해제시 예상되는 가동율 변화별* 품목 수(단위: 개, %) >

	△51% 이하	△50~△31%	△30~△11%	△10~0%	1% 이상	계
화 학	-	1	4	7	-	12
섬 유	-	-	10	2	-	12
일반기계	1	16	18	27	2	64
전기전자	-	1	26	12	1	40
자 동 차	-	-	-	17	4	21
기 타	-	2	25	12	1	40
계 (비중)	1 (0.5)	20 (10.6)	83 (43.9)	77 (40.8%)	8 (4.2)	189 (100.0)

* '95년 다변화 해제시 '95-'97년간 평균가동률과 '94년 가동률간 변화 차이
(자료 : 산업연구원)

○ 자동차, 가전 등 내구 소비재와 생활용품 등 단순 소비재의 수입 급증으로 매년 20~30억불씩 대일 무역적자 확대 우려(산업연구원)

(2) 개방(제도폐지) 성과

① 초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자본재, 부품·소재 자체개발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시장 보호로 인해 경쟁력 제고노력을 저해

- 단기적 상용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이를 위한 융자지원에 주력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보다 외국 기술도입이 크게 확대

※ 기술도입: 60-70년대(6억불) → 80년대(33억불) → 90년대(170억불)

② 수입선다변화 해제 후, 해당 품목의 대일 적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대세계 무역흑자가 대일무역 적자보다 크게 증가

- 전반적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수입선다변화 해제 효과 ('98년 이후 해제된 48개 품목)

* 대일 무역수지: △100백만불('98) → △747백만불('03)

* 대세계 무역수지: 11,464백만불('98) → 17,136백만불('03)

③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로 보호받으면서 경쟁력이 저하된 핵심품목들이 다변화 해제 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현상 발생

- 휴대폰: 수입급증이 예상되었으나 CDMA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오히려 기술력을 확보
- 컬러TV: 다변화 해제로 가장 큰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평면TV, 디지털 TV 등 지속적인 신규품목 개발로 기술력 확보
- 전기밥솥: 다변화 품목 해제 후 일본에 역수출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제고

< 전기밥솥 사례 >

- '99년 수입선 다변화 해제 추진시 품질이 우수한 일제 전기밥솥(예: 코끼리표)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을 우려
- 그러나, '99년 수입다변화 해제이후 초기에는 대일 무역적자를 겪었으나, 전기밥솥 업계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대일적자를 해소
- 특히, 대세계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 → 경쟁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보여줌

<수입선다변화 해제후 대일, 대세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 백만불)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대일	대세계	대일	대세계	대일	대세계	대일	대세계	대일	대세계	대일	대세계
전기밥솥	-4	12	-2	12	-2	17	0	19	1	23	0	22

사. 물질특허제도 도입

(1) 제도도입 배경 및 반대

① '83년 제1차 한-미 공업소유권회담 이후 제기되어 '87.7.1 도입

* 물질특허제도: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 그 자체에 대하여 허여하는 특허('제법특허'나 '용도특허'와 구별)

- 특정물질에 대한 물질특허권은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물건에까지 영향 (예) 특정 색소물질의 특허권, 페인트, 과자, 자동차, 건축물 등에 영향

② 제도 도입시 선진외국기술에의 예속화와 기술료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

① 모방제품 생산이 주류를 이루는 국내업계에 타격 발생 우려

- 종래 제법특허제도 하에서는 제조공정만 서로 다르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화학물질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었으나,
- 물질특허제도 하에서는 제조공정이 다르더라도 물질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그 화학물질을 생산하면 특허권 침해

② 기술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 심화

- 자체 신물질 개발능력이 떨어지는 국내기업은 물질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화학제품 생산 가능
- 특히 막대한 연구비와 오랜 연구기간이 필요한 신물질개발에 장기간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부담가중

③ 기술료 부담증가로 인한 관련제품 원가상승과 수출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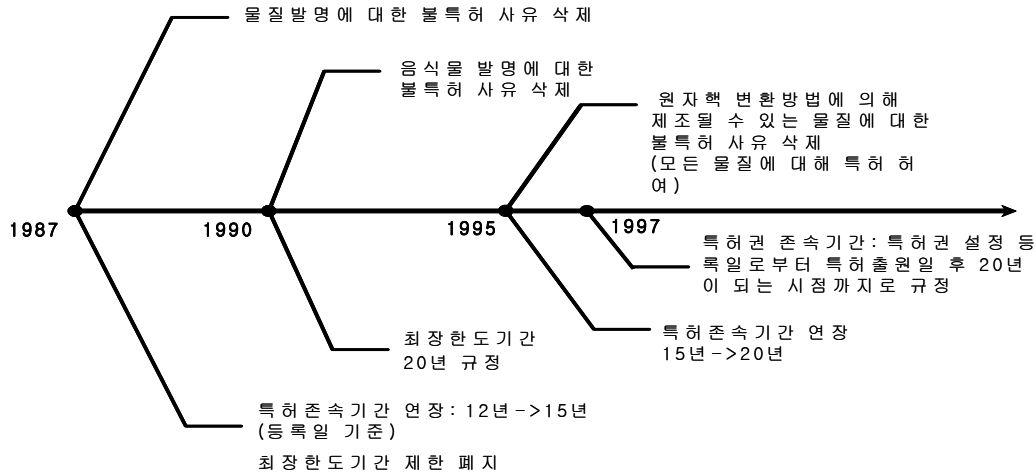
-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행사하여 가격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료 부담 증가
-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위축으로 화학제품 수출에 타격 우려

→ 이에 따라 전경련과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16개 관련 단체들은 공동명의로 조기실시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

③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 확대

① 국내 특허제도의 선진화 및 관련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 특허제도: 특허존속기간연장, 특허허여범위의 확대, 미생물기탁제도 도입 계기



※ 관련 산업정책: 신약개발지원사업(1990) 추진, 정밀화학산업 육성, 생명공학 육성법 제정 및 지원, 제약산업 육성정책 등 추진계기

② 물질특허제도 도입전후 3년간('86~'88) 105개의 기업연구소 신설

※ 화학, 의약분야 매출액 대비 R&D 비중: ('86) 0.69% → ('87) 1.86%

(2) 제도 도입 성과 평가

① 내국인의 물질특허 출원비중의 지속적 증가

※ 출원건수: ('88) 125건 → ('05) 906건

※ 내국인 출원비율(외국인대비): ('88) 6.2% → ('05) 35.3%

-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은 제도도입 당시 전무하였던 신물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현재 11건의 신약, 4건의 신농약이 등록된 상태이며, 32개사에서 총 92개의 신약개발이 진행 중(2005)

※ 최근 물질특허 분야 성공 사례

개발주체	물질	주요계약내용	계약연도	수출회사
(株)유한양행	피리미딘계 위궤양 치료제 YH1885	-기술이전료 : 1억\$ -Running Loyalty : 매출액의 10%	'00. 9.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SK(株)	우울증 치료제	-기술이전료 : 4천9백만\$ -Running Loyalty : 매출액의 10~12%	'00. 11.	Janssen
LG 생명과학	퀴놀론계 항생제	-기술이전료 : 4천만\$ -원료독점공급권 :3천5백만\$ -Running Loyalty : 매출액의 15%	'02. 10.	진소프트
(주)태평양	바닐로이드 수용체 길항제	기술이전료: 1억7백5십만유로	'04. 2.	슈바르쯔사 (독일)

②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 화학산업구조 중 물질특허와 밀접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밀화학산업의 비중 증가('90년 15.2%→'02년 19.3%)
- 물질특허제도 도입이후 200여건의 관련분야 외국인 투자가 진행되었고, 이중 약 30%가 의약분야에 집중

아. 바나나 시장 개방

(1) 추진배경 및 반대

① 수입자유화 이전에는 시장보호로 바나나 재배가 급속히 증가

- '89년 정부는 '89~'91년간 243개 농수산물 자유화 품목 고시
<바나나 재배현황>

구분	'82	'85	'86	'87	'88	'89
면적(ha)	2	58	168	358	414	443
단수(kg/10a)	1,800	2,390	4,145	4,488	4,444	5,179
생산량(톤)	36	1,391	3,316	10,104	18,408	20,881

② '91년 바나나 수입자유화시 제주 바나나 재배농가가 반발하였으며, 농민단체에서는 사과, 배 등 과일 산업 전체에 위기 우려

- 다만, 사전수입예고제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특별한 보상요구는 없었으며, 정부는 작목 전환을 위한 융자지원 등 추진

(2) 개방 성과

① 수입자유화가 과일산업 전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음

- 과일 전체 생산량이나 생산면적은 감소하지 않았음

【연도별 과일 생산현황】

(단위 : 천ha, 천톤)

연 도	'88	'89	'90	'91	'92	'93	'95	'00	'04	'05
면 적	120	127	133	138	148	155	174	173	157	154
생산량	1,714	2,108	1,766	1,765	2,090	1,920	2,300	2,429	2,411	2,593

○ 폭락을 우려한 사과 가격도 상승

* 후지사과(15kg 상품기준): ('91) 2만원→('00) 3만원→('05) 7만3천원

○ 또한 바나나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대

* 바나나가격(1kg): '90년 국내산 3,283원(수입산 1,785원)→ '05년 1,019원(수입산)

※ 수입자유화 이후 국내 바나나 산업은 소멸되었으나, 이는 바나나 산업의 비효율성 때문

자. 과자시장 개방

(1) 추진 배경 및 반대

① 우리나라는 시장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과자류에 대한 개방을 실시

- 1970년대 40%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던 과자류는 점차 관세가 인하되어 현재는 8%정도의 관세를 부과
- 우리 업계는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붕괴를 우려하여 개방에 반대
 - * “1970년대 과자 시장 문을 열었을 때 한국 과자 업체는 곧 망할 것 같았습니다.”
(오리온그룹 이화경 사장)

② 그러나, 국내 과자 업계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적극적 마케팅 등으로 경쟁력 제고 노력 계속

- 특히, 70년대 중반 텔레비전 보급을 계기로 과자의 맛, 포장, CM 송 등을 통해 대중의 취향에 맞춘 과자 보급 및 마케팅 노력 지속
 - * '74년 ‘초코파이’(오리온), '75년 맛동산(해태), '79년 빠다코코넛(롯데), '80년 포테토칩(농심), '82년 홈런볼(해태), '84년 버터링(해태) 등 신제품 출시

(2) 개방 성과 평가

① 개방 이후에도 국내 제과업계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 출시, 품질개선, 적극적 마케팅 등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

- 과자 산업은 개방 이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일부 제품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품목으로 발전
 - * ‘초코파이’(오리온), ‘꽃게랑’(빙그레) 등은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인기 품목
 - * 중국, 미국, 호주 등의 과자류 수입이 확대('80년 50만불→'05년 2.2억불), 국내 과자의 수출도 확대('80년 1,500만불→'05년 2억불)

② 국내 소비자도 보다 값싸고 질 좋은 과자를 접하여 후생 제고

차.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1) 추진 배경 및 반대

- ① '99.8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결정 후 '01.5월 GM-채권단 공식협상 돌입
 -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에 대한 우려 확산 및 노조를 중심으로 해외매각 반대 운동 격화
 -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 주장(금속연맹)
 - 외국기업의 단순 하청기업으로 전락하여 R&D 기능이 위축되고, 기술경쟁력이 약화
 - GM의 생산능력이 충분하므로, 평택공장을 폐쇄하여 대규모 인원감축
 - 해외 채권자들의 재투자없이 이익 회수후 자금 회수
 - 대우차 노조의 파업, 광화문 집회 등('01.1)으로 반대운동 전개
- ② '01.9월 GM-채권단간 인수양해각서 체결 및 '02.10월 GM대우 공식출범

(2) 개방 성과 평가

- ① '02.10월 출범후 GM 대우는 생산, 수출, 투자, R&D, 노사안정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
 - 3년 만에 생산 100만대를 돌파하고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05년 생산량의 91%(105만대)를 수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
 - * 생산량: ('03) 59만대→('05) 116만대, 수출액: ('03) 22억불→('05) 51억불
 - 설비증설 및 신차개발에 3년간 3조원을 투자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
 - * 주요 투자(억원): SUV 라인신설(6,700), 디젤엔진공장(4,750), 차세대 경차개발(1,700), 자동변속기 공장(4,200), 청라테크센터(1,000)

- 6,000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아울러 정리해고자 1,605명을 전원 복직하여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주도

② GM그룹 차원에서도 GM대우는 아시아 지역의 판매·R&D 허브로 부상

- 향후 GM의 차세대 소형차 핵심개발기지로 발전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

*HT(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분), GM대우를 GM 기업인수합병의 최고성공사례로 평가